

전남도·나주시, ‘기후에너지부’ 유치 한뜻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로”
전남도, 기후변화 해결책 노력
나주시, 전략산업 생태계 완비

전남도가 새정부에서 신설될 기후 에너지부 전남 유치를 본격 시동을 걸고 나섰다.

나주시도 에너지 공기업과 교육기관 등이 집적화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가 최적지라며 유치 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재명 정부의 기후에너지부 신설 공약과 관련해 “에너지 대전환의 결정적 전기가 될 것”이라며 “에너지수도인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로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에너지 정책은 그동안 부처간 칸막이 행정과 분절된 책임 구조 탓에 실효성이 크게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재생에너지 인·허가만 해도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지자체가 각기 따로 움직이는 구조다. 상황이 이러



빛가람 나주혁신도시 전경. /나주시

다 보니 기업은 불확실성에 발목 잡히고, 주민은 소외되며, 투자는 지연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이러한 구조를 통합, 기후위기와 산업·에너지 전환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국가전략의 중심 축이 돼야 하고, 전남도가 이를 위한 핵심파트너 역할을 하겠다는 게 전남도의 전략이다.

전남은 실제 지구온난화와 해수면 상승, 태풍, 가뭄 등 기후 위기 최일선

에서 기후변화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대한민국 기후리더십을 전세계에 천명할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 국가탄소중립에 기여할 여수산단·묘도 탄소포집활용저장(CCUS)와 여수·광양만권 청정수소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와 국립야생동물질병수역센터, 해양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국가해양생태공원과 블

루카본 바다숲 조성 등 농수산 분야 기후변화 대응 플랫폼도 구축하고 있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나주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에너지 공기업인 한전과 전력거래소, 한전KDN 등 에너지 공기업과 에너지 특화대학이 입지해 협업에도 유리하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나주는 전력산업 생태계가 두루 완비된 곳”이라며 “기후에너지부 신설은 에너지 전환의 심장, 나주에서 출발하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전남도는 아시아 태평양 최대 3.2GW 주민참여형 해상풍력 집적화 단지를 비롯해 영농형 태양광, 전국 최초 데이터센터 RE100 산단, 분권형 에너지고속도로 구축계획까지 수립하며, 에너지 미래를 현실로 만들고 있다. 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에너지 기본소득,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주민 이익공유제 등 새로운 정책 대안들을 만들어 주도적으로 추진해왔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하동군은 올해 5억9000만원을 투입해 ‘농번기 마을 식당’ 운영을 본격 추진한다. /하동군

하동군

농번기 마을식당 운영사업

하동군은 농업인의 가사 부담 해소와 결식 문제 해결을 위한 ‘농번기 마을식당 운영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지난해 시범 운영에서 호평을 받은 이 사업은 올해 참여 희망 마을 전체 지원을 위해 예산을 전년 대비 73% 확대한 5억 9000만원을 투입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총 90개 마을 약 2400명의 주민이 참여하고 있으며 각 마을의 특성과 농번기 일정에 맞춘 맞춤형 운영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하동(경남)=이도식 기자

대구시

‘재난안전기동대’ 운영 본격화

대구시가 대형 산불이나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재난안전기동대’ 발대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대구시는 10일 시청 산격청사에서 산림청 등 유관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재난안전기동대’ 발대식을 개최했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창설된 재난안전기동대는 지난 3월 달성군 함박산과 4월 북구 합지산 산불 현장에서 맹활약했던 ‘산림재난기동대’를 확대·개편한 것이다.

산불뿐만 아니라 태풍, 집중호우, 대설 등 자연재난과 다중인파 사고 등 사회재난까지 포괄적으로 대응하게 된다. /대구=김강석 기자

예천군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추진

경북 예천군과 (재)예천문화관광재단은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은 2026년까지 2년간 총 15억원(도비 6억원, 군비 9억원)을 투입한다.

지역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을 바탕으로 창조성과 다양성을 더해 특화된 문화콘텐츠 발굴과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 동력 마련을 목표로 한다.

사업 첫해인 올해는 군민문화기반 조성, 문화생활권 활성화, 문화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 5개 분야 9개 세부 사업을 추진한다.

/예천(경북)=김준환 기자

목포시

‘전남권 FPC’ 공모사업 선정

전남 목포시는 해양수산부가 주관한 전남권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전남권 FPC’는 마른김 등 전남지역 주요 수산물의 물량을 규모화하고, 부가 가치를 높이기 위해 산지에서 수산물을 매입한 후 전처리·가공·유통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복합 기반시설이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150억 원 규모로, 2027년 준공을 목표로 목포시 서남권 수산종합지원단지 내에 건립될 예정이며, 시설 운영은 목포수협이 맡는다. /목포(전남)=이대호 기자

대경경제자청, 입주기업 디지털전환 추진

추경예산 4000만원 확보
2단계 컨설팅 통해 진행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은 디지털 전환을 통한 입주기업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DGFEZ 입주기업 디지털 전환 촉진사업’을 추진한다.

디지털 전환이란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과 시장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로 기존의 프로세스 등을 개선하거나 새롭게 창출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디지털 전환을 통해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향상할 수 있다.

최근 디지털 전환이 중소기업 성장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대두되면서 대다수의 기업에서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기업 스스로 추진하기에는 여건상 많은 부담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경제자유구역 내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자 대구경북경제자유구

역청에서는 추경예산 4000만원을 확보하여 디지털 전환 촉진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 사업은 디지털 전환을 위한 첫 걸음으로 2단계 컨설팅이 이루어질 계획이며 정부 및 지자체의 공모사업 연계를 목표로 추진된다.

▲ 1단계 역량 수준 진단 단계는 DX 코디네이터를 활용하여 수요기업의 디지털 전환 이해도 및 준비도를 CCI 모델을 적용하여 진단하고 디지털 전환 기술 및 산업데이터를 활용한 과제를 도출한다.

▲ 2단계 심화 컨설팅 단계는 디지털 전환 기술·솔루션·협업 및 서비스 플랫폼 활용 전략 수립 컨설팅, 수준 진단 도출 과제의 추진을 위한 전략 수립을 통해 수요기업에 적합한 정부 또는 지자체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대구=김강석 기자 presskim@

목포시, 무안군 일방적 노선신설에 대응

목포시 중심 노선체계 전환 예고

목포시는 무안군이 10일부터 목포 시내버스 노선과 60% 이상 중복되는 남악·오룡지구 순환노선 333번을 신설·운영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시는 지난해 6월부터 무안군과 목포~무안 간 운행 노선 조정 및 손실 분담을 위해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왔으나, 이번 무안군의 노선 신설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것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특히 전라남도도에 관련 사항을 질의한 결과, 시·군간 사전 협의절차가 없어 전남도 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며, 무안군이 전남도와 목포시를 배제한 채 독단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목포(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목포시청 전경. /목포시

이에 따라, 시는 광역 중심의 공익적 노선체계에서 목포시 중심의 효율적인 노선체계로의 전환을 예고했다. 7월 1일 20-1번의 조정(유교리 미운행, 삼향동~평화광장 연결)을 시작으로, 9월 1일에는 남악·오룡 지구 노선(1, 2, 3번)을 임시 단축하는 한편 시계외 노선(108, 200, 800번)도 감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미시, 여성정책으로 ‘양성평등’ 이끈다

여성 일자리 확대·안전망 구축
전국 유일 여성가족부 장관상

경북 구미시가 전국 최초 여성정책을 잇달아 도입하며 실적 기반 행정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

여성 일자리 확대와 안전망 구축, 성인지 정책 확산 등 전방위 정책 성과가 이어지며 ‘양성평등 선도도시’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다.

주요 정책으로는 ▲일자리 편의점 도입 ▲경북 첫 여성친화기업 인증제, 우리집 경호원 파견사업 ▲전국 유일 여성가족부 장관상 수상 등이다.

구미시는 지난해 ‘경상북도 일자리 편의점 구미지점’을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이 사업은 경력단절 여성과

취업희망 여성을 위한 단기일자리 매칭과 자녀돌봄 연계를 결합한 복합형 일자리 모델로, 작년 기준 225명, 올해 123명의 취업 성과를 기록했다.

이어 올해는 경북 최초로 ‘구미시 여성친화기업 인증제’를 도입해 양성평등 기업문화 확산에 나섰다.

여성 1인 가구와 범죄피해자 등의 주거안전을 위해 구미시는 2023년 경북 첫 ‘우리집 경호원 파견사업’을 도입했다. 이 사업은 보안카메라, SOS 비상버튼, 24시간 긴급출동이 포함된 ‘3종 안심세트’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시는 2023년 폭력예방교육 부문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구미(경북)=김준환 기자 kih9@

부산상의 “해수부·HMM 이전 환영”

이재명 대통령 정책결단에 성명 발표

부산상공회의소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적 조치로 해양수도 부산이라는 정책비전을 제시하고, 해양수산부의 조속한 이전을 지시한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결단에 대해 환영의 뜻을 담은 지역경제계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를 통해 해양수산부 이전은 단순한 부처 이전을 넘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는 국가 운영 패러다임의 대전환인 만큼 지역경제계는 적극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부산상의는 “부산이 대한민국 해양

경제의 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수도권 위주의 정책결정과 자원배분으로 인해 오랫동안 소외돼 온 만큼 이제는 해수부 이전을 시작으로 해양산업의 중심을 실질적 기반이 존재하는 부산에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HMM 부산 이전과 관련해서도 단순히 대기업 본사 유치 차원이 아니라 해운·항만·물류산업 전반에 걸쳐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촉매제로서 청년고용과 지역투자, 산업역량 강화 측면에서 획기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새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